

무엇을 위한 대입자율화인가?

참여정부 시절 대학과 보수진영은 한 마음이 되어 '3불정책 때리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보수진영을 대표하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는 순간 3불정책이 휴지통으로 들어가 버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 동안 줄곧 우리 교육을 망치는 주범으로 지목해온 3불정책을 그대로 둘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즈음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있노라면, 뜻밖에도 정부가 3불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대입자율화를 약속해 왔고, 대학들은 이에 맞춰 새로운 입시제도의 골격을 짜느라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다. 대학들이 구상하고 있는 새 입시제도의 골격에는 하나의 기본적 공통점이 있다. 어떤 형태로든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대학마다 포장을 달리하고 있지만, 그 포장을 벗겨내면 이와 같은 본질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최근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가 그와 같은 속내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바람에 여론의 못매를 맞고 있다. 나 역시 이 두 대학의 행보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매도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들은 정부의 자율화 방침에 따라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입시제도를 선택했을 뿐이다.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다른 대학들도 비슷한 속내를 갖고 있다는 데 의문이 없다.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은 선불리 자율을 약속한 정부에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를 두둔하고 나서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입만 열면 3불정책을 비난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의아스러울 따름이다. 3불정책이 폐기되어야 마땅하다면 그 대안은 당연히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다. 그 당연한 대안을 선택한 두 대학이 여론의 못매를 맞는다면, 3불정책을 비판한 사람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두둔해 줘야 마땅한 일 아닌가?

3불정책을 그리도 비판해 마지않던 보수언론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자못 흥미롭다. 심지어 보수진영의 지지에 힘입어 정권을 잡은 정부마저 두 대학에 눈살을 찌푸리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3불정책이 대입자율화로 대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대학이 어떤 입시제도든 자유롭게 선택하게 놓아두어야 마땅한 일 아닌가? 어떤 입시제도는 되고 어떤 입시제도는 안 된다면 도대체 자율화를 한다는 말을 왜 깨냈는지 모르겠다.

자율화는 해주지만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는 자제해 달라는 것이 정부의 바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어떤 조건을 붙여 대학의 자율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율화가 아니다. 자율화의 허울만 둘러쓰고 있을 뿐 본질에서는 과거의 규제 기조와 아무런 차이를 갖지 않는다. 자제해 달라는 부탁을 할 양이면 아예 명백하게 금지하는 쪽이 더 낫다. 최소한 대학이 그 부탁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는 복잡한 문제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에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있다. 대학에 자율을 주더라도 본고사는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는 말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우리 대학들의 생리를 잘 모르는 데서 나온 순진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이 나온 지 1년도 되지 않아 우리나라 대학의 대표격인 명문 사학이 본고사를 실시하겠다고 나선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일이다. 대학을 향한 순진한 짝사랑이 헌신짝 취급을 받은 셈이다.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면 아

마추어라는 말을 들어도 싸다.

종전에 내가 3불정책을 두둔하고 나선 것은 우리 대학들의 속성상 그런 교육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우리 대학들이 입시제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측면은 우수한 학생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의 확보다. 대학이 우수한 학생을 뽑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욕심일 수 있다. 문제는 그 욕심이 지나쳐 입시제도와 관련된 다른 중요한 측면을 거의 완벽하게 무시하기에 이르렀다는 데 있다.

입시제도를 생각할 때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 사회적 책임성과 공정성이다. 우수한 학생을 선점하는 데만 눈이 팔려 사회적으로 무책임하거나 불공정한 입시제도를 채택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대학은 이 점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결여하고 있다. 자율화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들이 보인 행동이 그 좋은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 대학을 ‘지성의 전당’이라고 부르지만, 벌거벗은 욕망 앞에서 지성은 한낱 장식물에 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3불정책은 하나의 필요악일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3불정책의 폐지는 필연적으로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로 이어지게끔 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와 보수진영의 3불정책 비판이 논리적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본고사와 고교등급제가 바람직한 제도임을 입증해야 한다. 그 동안 나는 정부가 과연 어떤 근거에서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를 바람직한 것으로 정당화할 것인지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보기에 이 두 제도가 사회적으로 무책임할 뿐 아니라 불공정하기까지 한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정부가 이 두 제도를 실시하겠다는 대학에 눈살을 찌푸리는 태도로 나와 어안이 병병한 것이다. 그렇다면 3불정책이 추구한 바가 옳았다는 말인가? 3불정책의 핵심인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를 자율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그것은 허울에 지나지 않는 자율이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종전에도 대학이 별로 자율을 구속당한 적이 없다. 과연 무엇을 기대하고 이런 눈속임 자율을 허용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미 극심한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고려대학교가 계속 고교등급제로 의심되는 선발방식을 밀고 나갈지, 연세대학교가 공언한 대로 2012년부터 본고사를 실시할 것인지 아무도 자신 있게 예측할 수 없다. 다른 대학들이 어떤 입시제도를 들고 나올지도 오리무중이다. 이런 혼란은 앞으로 경험하게 될 더 큰 혼란의 서막에 지나지 않는다.

더 이상의 혼란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가 솔직한 태도를 취하는 것뿐이다. 대입자율화를 허용할 것이라면 대학에 명실상부한 자율을 부여해야 한다. 본고사가 되었던 고교등급제가 되었던 정부는 일체 상관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 이외의 다른 선발방식을 들고 나온다고 해도 절대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말로는 자율을 허용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간섭하는 체제가 지속되는 한 혼란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정부와 대학 사이의 험겨루기가 진행되는 와중에서 공연히 학생과 학부모만 피해를 입게 된다.

만약 본고사와 고교등급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금지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불행히도 그것은 3불정책으로의 회귀를 뜻하지만, 그것 말고는 본고사와 고교등급제의 실시를 막을 방법이 없다. 체면을 지키기 위해 지금처럼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미련 없이 체면을 던져 버리는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혼란은 자율화를 허용해 줘도 대학이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는 자제할 것이라는 비현실적 기대에 기초를 둔 미숙한 정책이 빚어낸 비극이다. 그 미숙한 정

책으로 인해 정부는 자율화를 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간섭을 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로 자신을 밀어 넣어 버렸다. 2012년에 가서도 완전 자율화가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전문답 같은 업포로는 이 난관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정부가 한 점 의심의 여지없이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 한 입시제도를 둘러싼 혼란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